

정치문화 측면에서 본 동서독 통합

문 태 운 (Moon, Tae-woon)*

(E-mail : twmoon@kookmin.ac.kr)

논문접수일 : 2011년 12월 30일

논문심사일 : 201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2월 20일

* 학위취득대학 : 프라이부르크대학
현직: 국민대학교 교수

정치문화 측면에서 본 동서독 통합*

<국문요약>

동서독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세계관 등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통일 이후 독일 사회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치문화를 정치체제 또는 정치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가치, 신념 등이라 할 때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독일 통일 20년의 사회변화를 독일의 '정치문화' 변이 속에서 고찰하여 동·서독 지역 간의 불균등과 편견의 원인을 찾고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온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서독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통일 독일의 정치문화에 대한 상이한 입장은 바로 정의에 대한 관점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정의에 대한 동독 사람들의 이해는 통일 이후 독일의 정치체제, 제도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이는 사회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서독 통합에 있어 핵심으로 동서독의 서로 다른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과 서로 다른 사회를 승인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동서독 주민들 간의 그리고 사회 간의 연대와 다원적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다.

[주제어] 독일통일, 동서통합, 정의, 시민성

* 본 연구는 국민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1990년 독일은 다시 통일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은 단순히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이 말한 극단의 20세기가 종말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구 동구세력의 모든 나라들에서 다양한 변화(Transformation)가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뜻하였다. 즉 구 소비에트 유형의 사회구성체에서 대의민주주적, 다원주의적이며, 시장 경제체제를 갖춘 권력분립과 인권 존중에 기반을 둔 국가체제로의 변혁을 의미하였다. 동독에 있어 이러한 변화는 서독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사회질서로의 통합을 의미하였다(Thumfart 2001, 6).

독일의 통일은 동독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자결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하지만 현실적 평가는 이상향으로 판정되었다. 동서독 통일 이후 동독의 제도적,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서독으로의 통합이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되어 사회, 정치적으로 서독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이행 될 것이라는 예상은 맞지 않았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독일 통일이후 통합과정에 대한 동서독 주민들의 상반된 인식에 비롯된다. 즉 통일 이후 독일 사회를 바라보는데 있어 각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세계관 등의 인식의 차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치문화를 정치체제 또는 정치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가치, 신념 등이라 할 때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결국 정치문화적 측면에서 동서독 사람들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 통일 20년의 사회변화를 독일의 ‘정치문화’ 변이 속에서 고찰하여 동·서독 지역 간의 불균등과 편견의 원인을 찾고 서로 다르게 형성되어온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사람들의 머리에는 여전히 장벽 또는 두 개의 명확히 다른 문화와

논리가 존재한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신설이나 보완이 자동적으로 통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이는 때때로 갈등이나 불신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문화는 사회의 전체 맥락 내에서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구조 그리고 정치문화와 함께 나타나고 그에 조응하는 것이다. 이는 동독의 통합과 변화는 단지 민주적인 제도의 창출이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독과 서독 주민들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이러한 정치문화에 대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정의에 대한 문제는 통일이후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으나 동시에 이 문제는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 소속감, 지난시기에 대한 평가 등 정신적이며 감정적인 것에 의해 파악되어 진다. 정의는 국가적인 공동체 삶의 중심적인 원칙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체제경쟁 시기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는 동서독의 정치문화에 대한 비교에 있어 하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Thumfart *ibid.*, 7).

통일독일에서 동서독 통합문제가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함으로써 정책이나 담론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서독인의 이론이나 정서에서 분석되어 졌기 때문에 통일이후 동독인이 겪었던 경험과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한 수준이다. 동서독간의 정치문화는 현재에도 유동적이며 궁극적으로 평가되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년간 체제변화로 동독인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동독인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 독일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해 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마련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독일 정치문화의 특징

독일인의 정치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친 신념체계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독일인의 사유구조와 정치적 행위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지배적 주제는 무엇보다도 국가이다. 독일제국시대를 전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 독일역사의 형성력으로서의 ‘국가’는 1821년 헤겔이 쓴 ‘법철학’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국가는 실제적 의지의 현실성이며 이 현실성을 국가적 보편성으로 까지 높여진 자기의지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자 및 대자적으로 이성적인 것이다. 이 실제적 일체성은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자기목적이며 이 목적에 있어서 자유는 그 최고의 권리를 얻고 또 한편으로는 이 궁극적 목적도 개개인에 대하여 최고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최고의 임무는 국가의 서원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문장에 대하여 논쟁과 주석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신격화’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실제 정치에 미친 영향이다. 독일인은 독일제국이후 국가를 이러한 역사적 실체로서 국가는 사회적 적대관계를 초월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하나의 인격체로 믿었다. 또한 국가의 성원으로서 여러 의무를 지며 조건 없이 복종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과거 백년간 모든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일인의 정치문화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법치국가의 실현이다. “국가의 권력은 법의 이념에 의존하며 그 모든 표현은 법에 의하여 정당화된다”(Albrecht 1961). “국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주며 오직 법률적으로 규정된 전제조건하에서만 이 영역에 간섭한다“ (Brockelmann 1963).

이 모든 정의에서 법치는 모든 정치적 행위가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파당·파벌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정치는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공동체적 과업이다. 따라서 ‘독일인은 이해집단의 지배와 정치갈등’에 대해서 공통적인 혐오감을 나타내었다.

오늘날까지도 법치국가의 개념과 현실은 독일정치의 승배물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1963년 알몬드와 버바(Almond and Verba)에 의해 재차 실시된 우스꽝스러운 설문에서도 여전히 독일인의 법치주의 정신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궁극적으로 법치국가가 모든 이해·갈등을 극복한다는 과장된 믿음 때문에 갈등에 대한 혐오감, 불편하고 다양한 불확실성을 기피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또 독일인에게는 전통적으로 법의 지배가 갈등의 활력보다 중요하며 법의 지배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 정치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엘리트의 역할이다. 기실 국가지상주의 이념이 독일제국이후 지배집단에게 권력을 집중시켰으며 이 집단들의 유일한 기반은 정부기구였다. 다시 말해 엘리트가 국가였다. 이 엘리트층은 국가의 관리, 군대, 교수와 판사들이다. 이들 엘리트층은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민사회와 아무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에 구조적 장애물이었다. 민주주의를 경쟁하는 사회세력을 전제로 한다면 엘리트에 의해서 조직화되고 완전히 통일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없다. 독일제국이 프러시아의 토지귀족인 용커와 관리로 구성되었다면 1918년의 혁명은 엘리트집단의 재형성이었다. 특히 행정엘리트에 의해 주도된 사회이다(Zapf 1965).

1933년의 국가사회주의 혁명은 바이마르체제의 엘리트층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나치 엘리트' 즉 '평민들의 발흥'이라고 부른 주변적 소부르주아층과 결부된 새로운 엘리트가 생겨난 것이다(Lerner 1951).

독일사회를 정치적으로 획일적이고 사회적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엘리트의 순환은 완전히 결여되어 있고 이동성 없는 정치엘리트의 교대에 있다고 하겠다.

다원적 민주적 엘리트의 의미와 그 사회적 기능을 논의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보하기로 하자.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여전히 서독에서 엘리트는 독점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획일적이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단순하게 공통된 이해 상황을 대변하고 있었다.

동독에서는 의도적인 혁명과정을 통해 하나의 독점집단이 또 다른 하나의 독점집단에 의해 대치된 것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결과는 독일역사에서 엘리트가 비자유주의적 유형으로 물리적이고 타율적인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 후 엘리트의 중요한 집단이 상당한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급속한 정치적 재편성에는 엘리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방향과 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였다. 1945년 독일의 엘리트들은 최소한 점령군에 의해 충원되었으며 새로운 엘리트뿐만 아니라 기존의 엘리트들도 선두에 서서 정치적·사회적 재편성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들은 완벽하리 만큼 점령군의 정책과 새로운 국가형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으며, 새로운 정치질서에 유리한 토양을 제공했다. 바이마르공화국 초기에 수구 엘리트들이 새로운 정치체제에 불응하고 옛 체제의 복구를 기도하여 <보수혁명>을 일으켜 마침내 히틀러의 <지도자 국가>의 길을 연 것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III. 동서독의 정치문화

1. 동독의 정치문화

동독 정치문화의 특징으로서 동독지역에서 정당정치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에서 개인은 아이덴티티의 원천일 뿐 아니라 자기신뢰, 자의식 및 자기존중의 원천이다.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동독인에게는 가부장적 지배와 국가에 의한 안전 보장적 전통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는 엘리트에 의하여 대중에게 지도되어 졌다. 의사소통 흐름은 일방적으로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흘러들어가는 문

화는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심지어 더욱 강화되어지는 경향이다.

재야엘리트란 확립된 엘리트와 대립하여 현존하는 정치제도나 이데올로기를 부정하는 엘리트를 말하는 것으로 동독에서 이들은 체제에 순응하거나 아니면 동독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동독의 경우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이러한 비판적 엘리트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독일통일은 서독의 힘에 의하여 이룩되었고 동독의 재건이나 재정은 서독의 원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동구권의 대변역시 다른 동구권 국가가 보여준 개혁의 내구력이나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도 동서독 통합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다.

통일이후 동독의 정치사회화나 민주화는 예비엘리트군 내지는 대항엘리트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하고 서독의 관료제에 의하여 행정적으로 처리 되었다. 개혁엘리트가 출현하여 동독의 민주화를 주도하였다면 아마도 새로운 대체문화(alternative Kultur)도 생겨났으리라 사료된다.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 서쪽의 규범에 맞추어야 하는 압력과 요구는 동독엘리트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엘리트 충원에 있어서 전문화와 중앙화가 강조되기 때문에 정치문화에 있어서 지역화와 특성화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나 지역출신의 엘리트들이 그들 자신과 지역의 특수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동독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며 나서고 있다. 그 지역 출신의 엘리트들은 서독의 모델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지역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며 자신에게 알맞은 모델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비록 동독의 엘리트들이 서독의 사회제도를 변형시킬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은 동독의 가치와 장점을 내세우며 자신감과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서독으로부터 이전된 제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며 다시금 새로운 정치형태를 개발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전문적 직능에 대한 불확실성은 소멸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단일한 이론이나 단일문화에 대한 강제는 줄어들 것이다. 동독인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계발하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통일독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것은 자명한 사실로 여겨진다.

2. 서독의 정치문화

독일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잘 짜인 기본법은 강력한 수상민주주의, 5%조항, 야당의 공조적 역할에 따른 일하는 의회 및 국민정당 출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지도력, 영속성, 조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독일 민족정서에 알맞은 민주제도가 창출되어 정치문화의 지속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Döring and Smith 1982).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호황과 복지를 전제로 하였다. 이 조건은 그 어떤 정치적 호기심과 효용보다 강한 것이었다. 가르비엘(Gabriel 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독일의 사회경제적 효율성은 민주제도의 적법성을 가져오는 모범적 사례이다.” 초기의 설문조사에서도 독일인은 그들의 경제제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Almond Verba 1963).

경제적 번영과 정치체제의 안정에 관한 상관관계는 원초적이며 추측컨대 본질적이다. 민주정이 평화와 교역 그리고 경제적 번영의 국가형태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대회랍에서 대영제국을 거쳐 미합중국과 통일 독일에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바다에 면한 나라들의 「개방성」이 다른 분야들에서도 다원주의를 촉진시켰다. 다당제와 야당공조원칙, 관용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불되어 졌을 때 지켜졌으며 사회발전에 기여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과 무역은 최우선 정책이었으며 경제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빈곤이 분배되어지면 민주적 국가도 제동의 징후가 나타난다.

경제의 기상조건이 정치의 청명도에 영향을 준다는 소위 “맑은 날씨 민주주의”(Schönwetter demokratie) 이론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험연구에서는 독일은 다른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보다도 시장경제와 그 사회체제 인지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된 민주주의적 정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적 경기변동에서도 정치체계가 덜 영향을 받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다.

과거의 좌파적 비판가들조차도 서독의 민주 발전에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법치국가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결점과 징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는 잘 안착 되었다”(Blank and Wollmann 1992). 대체적으로 말해서 서독정치 문화에서 새롭게 얻어진 자유주의는 동독의 병합으로 야기될지 모를 훼손을 생각할 때 하나의 값진 재화일 수 있다.

IV. 동서독 정치문화의 충돌

한스 요하임 마쯔(Hans-Joachim Maaz 1995, 195-196)는 동독인의 정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독일민주공화국(DDR)은 하나의 완전한 시간 손실이었다 말인가. 우리들에게 값어치 있었던 모든 것이 손실되었거나 저평가되었던 말인가? 정말로 40년 세월을 동독인으로 살아야만 했었던 것이 반성의 원초이며 이제는 ‘메르체데스-경제(Mercedes wirtschaft)’ 앞에서 트라비(Trabbi)¹⁾ 생산의 착오를 고백해야 한단 말인가?”

동독인의 서독인에 대한 열등감은 통일 초기부터 형성되었다. 이전의 모든 가치들은 소멸되어갔고 무의미해졌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경제기적”은 아주 거대해야만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또 사회주의가 단지 도이취마르크(DM)에 의하여 비하된다면 동독인의 심정은

1) 트라비(Trabbi)는 동독의 국민자동차를 뜻한다.

어떠하였겠는가.

많은 동독인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구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2등급 독일인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선거 때마다 극우정당이나 극좌정당이 출현하며 더욱 더 통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독의 정치제도와 동독의 고유가치 - 더 많은 사회보장, 더 많은 자기정체성 - 사이의 편차는 동독인에게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통일 후 동독지역의 민주화 과정에서 동독의 정치지도자는 독자적인 노선이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서쪽의 지도원리를 모방하였고 동독 고유의 이해, 정치문화나 정체성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독의 민주화 과정은 단지 서독 민주주의의 이식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독주민은 여전히 정치참여에 무관심과 불신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책임과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정치참여, 신뢰와 자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야 하는데 동독주민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이러한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일이후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동독사람들은 연대, 사회적 안전, 공동체적인 삶, 사회적 인정 등 기회균등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는 통일이전 시기가 더 좋았다고 평가를 한다.²⁾ 이러한 결과는 군나르 빈클러(Gunnar Winkler)의 연구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독사람들은 상품의 공급, 여행, 다양한 단체, 개인적 자유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로 인해 얻은 것으로 평가하지만 반면에 정치, 사회적 관계, 문화, 노동, 개인적 및 사회적 안전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umfart ibid., 8).

이러한 결과들은 동독 5개주의 편입과 급속도로 추진된 통일과정

²⁾ 반면에 자치(Selbstbestimmung), 자아실현(Selbstverwirklichung) 그리고 자유에 있어서는 동독시절 보다 통일된 독일이 더 좋다고 평가를 하였다.

이 어찌면 현재의 자유주의를 정체시키거나 이미 이룩한 성과를 위협할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독일의 민주주의는 옛 독일의 권위주의적인 정치적 이해를 가진 동독인의 출현으로 인하여 새롭게 도전받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Feist 1991). 개인의 현재 물질적인(경제적인) 상황이 통일이후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평가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의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상황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나타난다. 구동독의 일반적인 복지와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회상을 통해 당시의 것이 더 좋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될수록 현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 나쁘게 평가하게 된다. 또한 서독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탐욕스러우며, 무자비하며, 이기적이며 권력지향적인 자본주의적 인간상으로 이에 반해 사회주의적 인간상은 협력적이며, 동적이며(sympatisch), 양심적이며 진실한 인간상으로 묘사되면 될수록 현재의 이기적인 사회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요소를 갖는 복잡한 내용들에 의해 구성된다. (Thumfart ibid.)

여기에서는 동·서독 사이의 가치 및 행태정향의 결정적인 차이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동독에서는 민주주의의 승인을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결부시키고 있다. 통일 바로 직후 동독인의 42%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가장 좋은 국가형태로 여겼으나 1년 뒤 경제적 여건의 악화 때에는 단지 32%만 지지하고 있다(Allenbach 1991). 타인에 대한 신뢰도 동독인은 서독인보다 떨어지며, 자기강화(Ich-Stärke)나 자기 신뢰도 서독인보다 약하게 형성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행태도 더 권위적이며 마찬가지로 산업계나 행정조직에서도 그러하다. 권위주의 앞에서 소외를 느끼고 있는 시민의 수도 서독인보다 많다. 독일의 전통적인 특색인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갈등에 대한 혐오감과 대동단결에 대한 필연성을 두 개의 독일일 때보다 동독인에게 더 만연되고 있으며 이는 서독인이 민주적 의식으로 변혁되기 전인 50년대의 서독인의 형상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Greiffenhagen 1991).

서구의 민주주의 지표에 의하여 통일독일의 정치문화의 실상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서 매우 어렵다. 특히 동독지역에서도 서독에서와 같이 민주제도의 발전이 다만 시간적 유예만 가지고 가능할까는 문제시된다. 여기에서 우선 서독의 민주발전의 계기가 된 「파국과 쇼크」라는 요건을 가지고 동독의 경우를 고찰해야 한다.

이 두 요소 또한 동독 붕괴의 틀림없는 요인이다. 동독인은 그들 체제로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주의의 공동체 의식이나 자발적인 상호원조를 통한 연대의식이 사회 안전에 더 필요한 원리라는 것도 믿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서독식 민주주의가 전후 서독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동독인에게도 역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최상의 국가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25%가 더 나은 정부형태가 있다고 믿었으며 43%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Fuchs 1991).

그러나 동독의 붕괴는 엄밀한 의미에서 혁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원래 하나의 혁명이 아니라 혁명적인 결과를 가진 하나의 와해이다. 혁명의 필수조건으로 두 개의 축 —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원리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대항엘리트(Gegeneliten)를 필요로 한다면 이 말은 설득력을 갖는다. 동독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결여되어 있었다. 소련제국의 쇠퇴, 체코와 헝가리의 국경개방과 경제적 기술적인 후진 등 연속적인 붕괴현상이 동독에서 변혁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법적·제도적 근거와 정치계급의 전반적인 수정을 동반하였다.

동독에서 대항엘리트가 양성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주하거나 추방되어져야 만했기 때문이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생길 때까지 20만 명이 동독을 떠났으며 그 후 약 50만 명이 도주, 강제퇴거 그리고 서독에 의해 재정적인 환매의 길을 걸었다(Meuschel 1990). 이러한 상황을 다른 소련의 위성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현저한 차이가 눈에 띈다. 즉 폴란드에서는 자

유노조(Solidarnosz)와 카톨릭 교회에서 생성된 두 개의 대항엘리트그룹, 체코에서는 언제나 지식인 대항엘리트가 있었으며 헝가리에서는 동구 변혁 당시 당기구 산하에서 존재했으나 부분적이거나 미리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다(Meuschel 1990). 이들 나라에서는 또한 지적인 반체제 문화가 있었다. 동독에서는 이러한 문화를 주도할 많은 저명 작가나 학자들이 이주나 서독으로 추방되어졌다.

또한 이들은 주로 시민계층 내지는 소시민 계층으로서 이주 후 그들의 활동의욕이나 자유의지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방해받고 있었다. 추방은 곧 사회적 안전과 연대의 상실을 의미했으며 커다란 경제적·심리적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소련의 통제하에 있던 다른 동구국가들의 시민정신이 깨어있어 저항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동독은 동구 중에서 가장 소시민적인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결과 동독인은 체제에 대해 항상 순응할 준비와 서둘러 복종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다른 동구제국이 강화된 사회적 자의식 속에서 경제적·정치적 개혁을 추진한 반면 동독에서는 전체적으로 늦은 경과를 보였다.

말할 것도 없이 엘리트의 사회적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사회를 위한 전형적 역할이다. 사회의 제 문제를 정의하고 그 가치를 정립하며 사회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의 엘리트 연구가들은 엘리트의 쇠퇴를 매스미디어의 영향에서 확정짓고 있다. 모든 서구의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원화와 분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엘리트의 능동적인 힘은 상실되고 그 대신에 점차적으로 미디어가 이 기능을 떠맡고 있다. 특히 독일은 이러한 과정의 선두에 서있다는 것이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동독에서는 엘리트 부재현상으로 매스미디어가 생활영역의 가치정향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동독시민의 약 80%가 TV를 믿을만한 유일한 여론형성 기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Feist 1991).

V.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

1. 동서독의 정의관에서 본 사회적 통합

1998년 서독주민의 3/4은 통일이 자신들에게는 단점들만을 안겨주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83%는 통일이 동독주민들에게는 명백하게 이익이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동독주민의 절반이상은 통일로 인해 나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75%는 서독 주민들이 만이 통일의 장점을 갖게 되었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Thumfart ibid., 9)

1997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2개의 문항 중 10개의 문항에서 동독주민들은 동독이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 서독에 비해 정의로운 사회였었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는데, 여성의 생활상태, 노동과 사회적 업무적의 분배(Verteilung der Arbeit und Leistungen), 임금과 소득의 분배와 같은 부분에서 이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영업의 가능성, 소비재 상품의 공급등의 영역에서는 통일된 이후의 독일 사회가 더욱 정의로운 사회로 동독사람들은 생각하였다.

그러나 동독사람들에게 있어 정의와 부정의는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비교했을 때 통일된 독일이 동독에 비해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동독사람들에게 있어 정의 규범은 우선적으로 평등 그리고 평등한 분배로부터 인식된다. 즉 동독사람들은 전체 사회를 위해 어떠한 분배기준이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평등과 같은 사회주의적 원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995년의 조사에 의하면 명확하게 사회주의적인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가에 의해 조직된 평등한 분배가 정의로운 것으로 동독사람들은 생각을 한 반면에 서독 사람들의 경우 개인주의와 자유를 우선적으로 생각한 반면에 소득에 있어 차이는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동독사람들은 현재의 차이에 대해 불안, 공포, 질투 그리고 삶에 희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감정적인 태도는 서독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고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 또한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서독사람들과의 경제적인 차이를 질서 그리고 분배와 관련된 규범의 훼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동독사람들의 통일 독일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일체감은 동독사람들로 하여금 서독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며 자신들을 2등국민으로 느끼게 한다(Anna Klein and Wilhelm Heitmeyer 2009).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질서원칙 그리고 분배 규칙의 정당성은 서로 다른 사회적 조직들 간의 상호투과성(Durchlässigkeit)이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에 달려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조직 간의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정당성이 높아지고 역으로 조직들간의 투과성(침투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정당성이 낮아진다. 동서독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동독사람이 서독사람처럼 변모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으며 그 반대의 상황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동독의 서독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서독간의 관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동서독 사람들은 서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며 특히 동독 사람들의 경우 집단적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일체감을 발전시켜 경제적으로 향상되며,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동독사람들은 동서독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침투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계층간의 이동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적 배분질서와 그 결과에 대해 동독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치질서에 대한 안정성과 합법성이 그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다면, 통치 질서에 대한 내부적인 이해, 합의 또는 사회구성원의 신념으로 이해된다면 정치질서의 기능방식은 그들의 고유한 도덕적인 원칙, 관점과 일치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의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을 때 통일된 독일의 새로운 민주적인 정치시스템은 동독사람들로부

터 지원과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유르겐 매스(Jürgen Maes), 만프레드 슈미트(Manfred Schmitt) 그리고 울리히 자일러(Ulrich Seiler)는 정의의 규범 관점에서 독일의 사회적 통일은 아직 완성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Thumfart *ibid.*, 11).

동독사람들에게 있어 평등과 관련된 정의관(Gerechtigkeitsvorstellungen von Gleichheit)은 집단적인 것과 관련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는 한 개인의 물질적, 구체적인 상황에 의해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동독사람들의 이러한 정의관은 사회적으로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갖는 그리고 자신이 타인에 대해 갖는 인물상과 관련된 것으로 상호적인 교환관계로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 서독에 대한 부정적인 집단적 일체감의 형성에 근원이 된다. 즉 동서독 문화 간의 상호침투성이 매우 낮고 그리고 동독에서의 새로운 정치시스템의 합법성이 정의규범에 관한 문제에 있어 낮은 수준을 갖게 된다(*ibid.*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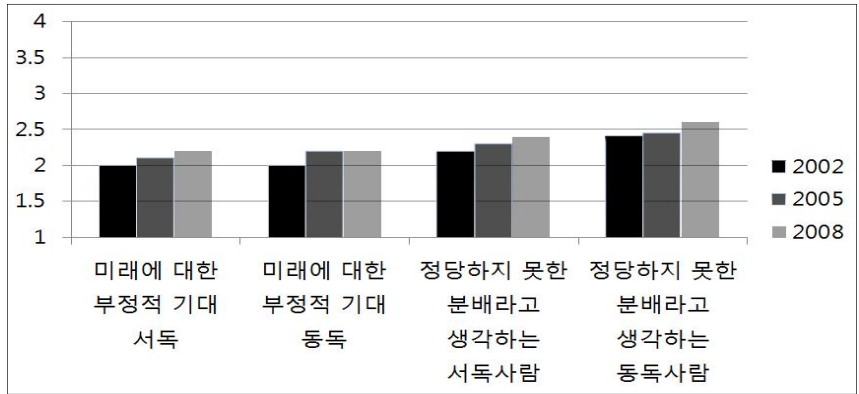
2. 사회적 통합과 관련한 3가지 차원

사회적 통합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기능적인 체계통합, 제도적인 사회통합 그리고 문화적인 사회통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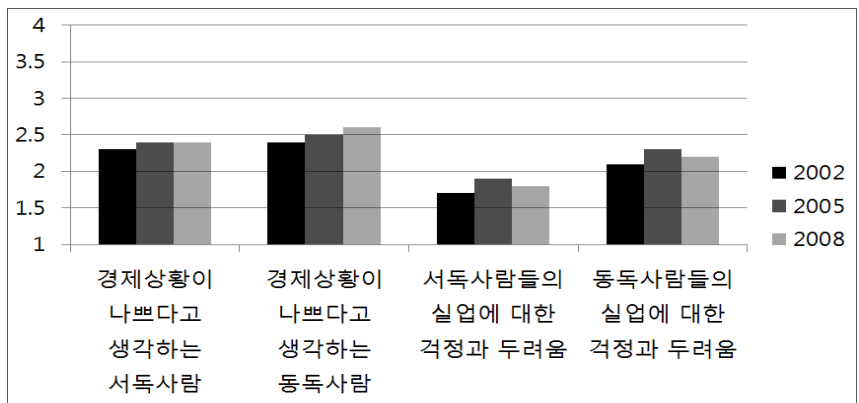
첫째로, 기능적인 체계통합은 사회구조적 분야의 상호의존적, 보완적 연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사회 하부체계중 하나인 노동시장과 교육기구가 상호 호환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원활한 연계를 통해 사회에서 갖는 인정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독과 서독에서 어떻게 통합이 달성되고 있는지 또는 동독사람들이 서독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통일이후 실업률은 명확하게 증가하였다. 동독에서의 실업률은 확실히 더 높고 그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실업의 공포에 쌓여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여건이 불리하다고 평가하고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동독사람들이

서독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경제적·문화적·심적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도표1-1> 기능적 체계통합 - 2002, 2005, 2008년 동독과 서독에 있어 평균치의 변화. Anna Klein and Wihelm Heitmeyer 2009, 17에서 재인용



<도표1-2> 기능적 체계통합 - 2002, 2005, 2008년 동독과 서독에 있어 평균치의 변화. Anna Klein and Wihelm Heitmeyer 2009, 1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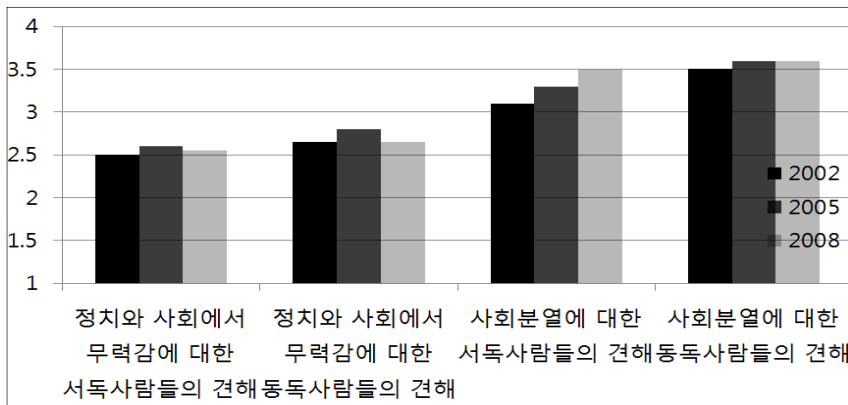


둘째는 제도적인 사회통합의 측면으로 이는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막기 위한 이해 조정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도표에서 볼 때 이 부분에 있어 주관적으로 사회적 정의

는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설명된다. 서독사람들은 사회적 분열이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뿐만 아니라 사회분열에 대한 인식은 지난 시기 동서독에 있어 변화가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에 있어서의 무력감이 정치참여 기회의 상실로 그리고 계속해서 심화되는 사회적 분열은 정의의 원칙들이 미흡하게 관철되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으로 연결될 것이다.

셋째는 사회적, 정서적 측면으로 이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생겨나는 마을, 도시, 거주지역 등의 공간에서 감정적인 연결의 생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동독사람들은 주관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못하다는 높은 부담감을 갖고 있다.

<도표2> 제도적인 사회통합 - 2002, 2005, 2008년 동독과 서독에서 평균치의 변화. Anna Klein and Wihelm Heitmeyer 2009, 17에서 재인용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차원에서 동서독 간의 편차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못한 불안 또는 위험은 동독에서 더 높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 그리고 사회적 분열에 대한 인지와 관련한 지표에서는 서독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심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Anna Klein and Wihelm Heitmeyer

2009, 18). 이러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박탈의 이론(die Theorie Relativer Deprivation) 또한 비슷한 내용을 제시한다. 단지 이 이론에 서는 한 사회 내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상대적인 위치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주관적인 인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상대방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감정에 대한 것으로 2008년 6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동독과 서독 주민의 절반정도는 통일이 각각의 지역에 많은 단점을 야기했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동독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은 서독사람들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략 64%의 동독주민들이 자신들은 2등 국민으로서 느낀다고 말하였다. 또한 동독 주민들의 77%는 서독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정당한 몫보다 덜 받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거의 3/4이 서독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Anna Klein and Wilhelm Heitmeyer 2009, 19).

서독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동독사람들의 견해는 여론조사를 통해 그 비율에 있어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계속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대략 81%의 동독사람들은 자신들이 서독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덜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2002년의 경우 60%의 동독사람들이 그런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감정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윗세대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1990년대 초 동서독 주민들 중 대략 10%만이 생활환경조건이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였지만 2004년의 경우 동독주민의 68% 그리고 서독 주민의 43%가 생활 환경에 있어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답하였다(Ibid.).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감정은 동독 사람들로 하여금 외국인, 이슬람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인종주의적인 견해를 갖게끔 한다. 아마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서독사람들이 동독사람들과 비슷하게 느낀다면 외국인, 이슬람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인종주의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ibid. 21).

동독사람들은 사회구조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 심리적으로 통합되

어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서독 사람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관적인 감정은 동독사람들에게 매우 넓게 퍼져있다. 통합에 대한 부담 그리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감정은 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리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절하 한다. 동독 사람들이 통합에 대해 느끼는 부담 그리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왜 동독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외국인등을 평가절하 하고 이들을 혐오하는지 설명해준다. 또한 서독에 서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 또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설명된다.

<표1> 통일이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의 대한 의견.

Anna Klein and Wilhelm Heitmeyer 2009, 1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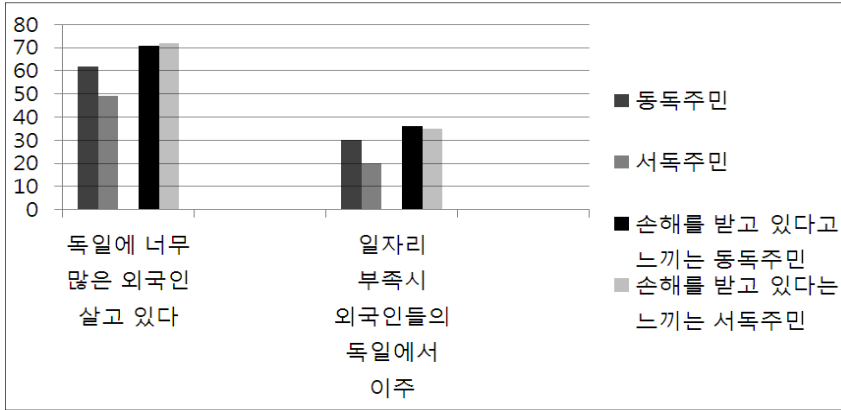
	서독	동독
통일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55.9%	57.3%
2등국민으로서의 인식	13.1%	63.9%
동독은 서독으로 인해 서독은 동독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24.2%	73.0%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0%	77.0%

아래의 도표는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동독사람들은 독일에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은 또한 일자리가 부족할 시 독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서독사람들 중 자신들이 동독사람들로 인해 손해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단지 동독사람들이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

문에 전체적인 수치만이 높을 뿐이다.

<도표4> 외국인 혐오에 대한 의견.

Anna Klein and Wihelm Heitmeyer 2009, 20에서 재인용



VI. 대안적 모델의 전제 조건

정의로운 것 역시 각자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의는 형제 사이에 있어야 할 정의와 같지 않으며 친구들과 사이에 있어야 할 정의는 시민들 사이의 그것과 같지 않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는 서로 다른 이해와 친애가 생겨난다. 부정의 역시 각각에 있어 서로 다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서로가 대등한 사람들 사이의 교체에는 자발적인 상호 이해와 우애가 생겨나며 정의와 연대가 동시에 생겨난다. 그 구성원은 ‘같은 배를 탄사람’ 또는 친구라고 부르며 상호간의 친애가 발전하고 이 정서적 결합은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 결속을 발휘한다. 공통의 교체 속에서 상호책임과 의무라는 사회적 연대로 발전한다.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은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며 정치적 공동체는 처음부터 어떤 유익함을 목적으로 출범하고 있다. 우리가 법

을 제정하고 법을 지키는 것도 바로 상호 이익의 증진이며 사람들은 정의를 공통의 이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가 일시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삶 전체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의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상충적 요소들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사회체계가 생산해 낸 물질적·정신적 재화의 분배에 관한 원리를 정의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핵심적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서 보이듯이 어떠한 차등과 불평등이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와, 어떠한 것이 차등의 원칙으로 용인될 수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사회정의는 글자 그대로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과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독점, 부패, 기아, 실업, 질병이라든지 이를 치유하기 위한 빈부격차 해소, 기회균등과 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정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이다.

비록 경제적 요인만이 사회정의가 풀어야 할 유일한 과제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의가 풀어야 하는 수많은 과제들은 우선 물질적 결핍으로 인해 생겨난다. 대체로 동기가 물질적 궁핍에서 정의의 문제는 생겨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입국가에 대한 폴라니(Polanyi)의 언급은 의미가 있다. 그는 개입국가의 탄생을 금세기 대변환을 이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1929년 대공황에서 보듯이 국가개입 없이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자본주의 발전은 기존의 자족적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의 원리를 여지없이 붕괴시켰다. 이와 함께 자유주의 국가로부터 개입주의적 국가로 국가의 성격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청되었다. 이는 결국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성격, 정보, 범위 등의 문제로 귀결된다. 오토 슐레히트(Otto Schlecht)는 이와 관련해 10가지 명제³⁾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이 보장된 자유를 기초로 한 질서를 원칙으로 하며,

이의 효율성은 사회적 형평, 배분 정의 및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했을 때 비롯되는 것으로 국가는 시장경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의 틀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는 서로 다른 동독과 서독의 정치문화가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그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로 성장하면서 국가재정조달의 능력을 잃고 있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지출의 확대는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대한 장애가 된다. 특히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국가부문에서 세입과 세출의 적자폭이 점점 벌어지는 위기를 나타낸다 (Gough, 1969). 이 때문에 1970년대 중반의 세계적 경기침체 이래로 많은 국가에서 복지비용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독일과 같이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시장경제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며

3) 10가지 명제는 다음과 같다. 1. 시장경제의 주체는 행동하는 개인을 전제로 한다. 각자는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2. 시장경제는 개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개개인의 행위에 도덕적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이익단체간의 합의가 촉진되고 사회체계가 유지하게 된다. 3. 국가는 순수한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에 대해서만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의 합성을 찾아낼 수 있다. 4. 시장경제의 동태적인 경쟁이 보장되어야만 시장경제는 자유를 기초로 한 질서가 성립될 수 있다. 5.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사회적 형평, 배분정의 및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경제질서에서 비롯된다. 6. 국가에 의한 시장조정은 중기적인 성장전략의 범위 내에서 투자와 혁신을 창출하는 거시정책에 의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7.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은 시장경제적인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전제로 한 국가의 보완적 기능이다. 8. 사회적 시장경제는 그 무엇보다도 환경친화적인 기본질서를 설정하고 그 어떤 질서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 9. 인간의 자유는 어떤 측면으로도 분할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시장경제는 법치국가적인 민주주의를 필요로 한다. 10. 사회적 시장경제는 열린사회와 다원주의적 사회질서의 실현이다. 이 때 비로소 관용과 평등이 주어지며, 약자에게도 자기실현의 기회가 제공된다. 국제적으로도 사회적 시장경제는 평화지향적 질서를 추구한다(Otto 1993, 86-88).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 부조제도와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내는 것이 그 존속의 필요충분조건이라 하겠다. 자연생태계의 파괴로부터 오는 환경위기에 직면하여 인류의 생명과 경제생활을 제공받는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적 테마가 되어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토니 기든슨(Anthony Giddens), 독일과 영국의 수상이었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와 토니 블레어(Tony Blair)가 말하는 제3의 길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즉 지속적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력 강화와 고용기회의 창출, 미래지향의 교육·훈련을 보장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공, 복지국가로 통한 그리고 세대간 계약의 쇄신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사회에서 관용의 문화를 구축하여 동서독 지역간의 노동 및 생활 면에서 균일화를 촉진시켜 독일의 내부통일을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VII. 결론

오늘날 만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동독지역은 더욱 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자본축적을 가속화하고 가시적인 경기부양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의 확대는 또한 그 결과로 무한대의 경쟁적 시장질서, 고용 없는 성장과 불안정한 일자리, 이혼율의 상승, 저출산의 초래와 길어지는 노후 생활과 함께 증대되는 궁핍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기는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의 정치문화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이은자리가 없이 서독의 문화와 융합할 것인가? 또는 통일독일은 궁극적으로 서독과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해 낼 것인가? 또는 동독 정치문화의 좋은 점이 새로운 정치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까?

이는 결국 동서독의 서로 다른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개연성과 서로 다른 사회를 승인할 수 있는 기회와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동서독 주민들 간의 그리고 사회 간의 연대와 다원적 공동체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동서독 통일로 제도의 수평적인 안정은 이룩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속에서 대중과 엘리트 간의 수직적 통합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충원에서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은 새 제도에 대하여 수동적 자세를 보였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으로 무정치적(apolitisch) 태도가 생성되고 있다. 대중은 정치엘리트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는 한계와 미숙함을 감지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는 필요조건일지 몰라도 충분조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독일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숙고해야 한다. 먼저 동쪽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엘리트와 선량한 시민이 생성되겠는가? 다음으로 동쪽의 과거가 서쪽의 규칙에 의하여 평가받고 서쪽의 규범에 의해서만 측량되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의 융합된 정치문화가 생성되겠는가?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은 동독의 정치문화가 완전히 제거되었던 것이 아니라 새롭게 평가를 받거나 재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같은 진보적 지식인은 동독의 가치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통일의 규범적 결손”(normative Defizite der Einheit)라고 지적하고 있다(Habermas 1994, 41).

동독문화의 재발견은 긍정적 발전으로서 동·서독 문화의 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서로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서로의 포부와 자율을 승인함으로써 새로운 독일을 재건하는데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Mushaben 1997, 17)

이러한 동독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더불어 동독인의 자신감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독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첫째, 동독지역 출신의 엘리트를 육성하고 정치적 역량의 강화 둘째, PDS(지금의 좌익정당)이 동독인의 정체성과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의 변모 셋째, 민주화과정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자의식을 가진 동독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동서의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공존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김영진, 2005, 『시장 자유주의를 넘어서 : 칼폴라니의 사회경제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 이종수 옮김, 1986, 『분단독일
의 정치사회학』, 서울: 한길사.
- 오토 슐레히트(Otto Schlecht) 저, 안두순 옮김, 1993, 『사회적 시
장경제』, 서울: 비봉 출판사.
- 이안 고프(Gough Ian) 저, 김연명·이승욱 옮김, 2010, 『복지국가
의 정치경제학』, 서울 : 한울아카데미.
- Blanke, B. and F. Nullmeier, 1991, "Die Bundesrepublik im
Uebergang - Uebersicht ueber den Band," Blanke, B and
H. Wollmann ed., Die alte Bundesrepublik: Kontinuitaet
und Wandel, Leviathan-Sonderheft 12,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Doering, H. and G. Smith, 1982, Party Government and political
Culture in Western Germany, London: Basingstoke.
- Feist, U., 1991, "Zur politischen Akkulturation der vereinigten
Deutsch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1 ~12, pp.
21-32.
- Fuchs, Dieter, 1991,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kultur in
vereinigten Drutschland. Eine empirische Studi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2, pp. 35-46.
- Greiffenhagen, Martin, 1991, "Die Bundesrepublik Duetschland
1945~1990. Reformen und Defizite der politischen
Kultu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2, pp. 16-26.
- Habermas, Jürgen, 1994, The Past as Future, interview with
Michael Haller, Penky, Max 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Joppke, Christian, 1995. East German Dissidents and the Revolution of 1989: Social Movements in a Leninist Regim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Klein, Anna and Wilhelm Heitmeyer, 2009, "Ost-westdeutsche Integrationsbilanz,"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28, pp. 16-21.
- Mazz, Hans-Joachim, 1995. Behind the Wall: The Inner Life of Communist Germany. New York: W. W. Norton.
- Meulemann, Heiner, 1997, "Research Report: Value Changes in Germany after Unification, 1990-1995," *German Politics*, Vol. 6, no. 1, pp. 122-139.
- Meuschel, S., 1991, "Revolution in der DDR, Versuch einer sozialwissenschaftlichen Interpretation," Zapf, Wolfgang ed., *Die Modernisierung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 Moon, Taewoon, 2011, "20 Jahre deutsche Einheit - Ungleichheit der politischen Kultur,"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1호, pp. 181-207.
- Pollack, Detlef, 1993, "Wertwandel und religiöser Wandel in Ostdeutschland," *Berliner Debatte*, Vol. 4, pp. 89-96.
- Poppe, Gerd, 1991, "Es geht alles ein bisschen von oben herab,"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Vol. 4, pp. 237-246.
- Schaefers, Bernhard, 2004, "Elit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10, pp. 3-7.
- Thumfart, Alexander, 2001, "Politische Kultur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9-40, pp. 6-14.
- Zapf, Wolfgang, 1965, *Wandlungen der deutschen Elite*, Munich: Piper.

A Political Perspective on German Reunification

Moon, Tae-woo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German states whose people previously had belonged to one state and where a sense of common national identity had been cherished was the product of an unusual experiment in statecraft. The parallel existence of two German states with extreme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for almost half a century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amily models, value systems, ways of spending free time and work ethos - to give only a few examples.

Reunification brought about the transfer of the political system, institutions and business management rules from the west to the east. However, the contact of the two societies in many cases resulted in culture shock. Different political sentiments have developed in eastern and western Germany.

This article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oblem of cultural and soci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ocieties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One of the most evident differences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German societies is present in the perception of 'justice.' The two German societies define 'justice' differently and as a result have different views regarding the political system and institutions. This primarily

concerns mindsets: Germans from both parts of the country still do not see themselves as one nation, which is manifested through mutual stereotypes and differences in behaviour.

The dissonance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social realities impedes the formation of a pan-German identity.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it is the social divides which seem to be the greatest challenge in the context of a total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knitting together of the two societies until they grow into one body will require a open-mindedness, great effort and great sensitivity from both eastern and western Germans.

Keywords : Reunification of German, Justic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Citizenship